



물 걱정 없는 영농 환경 조성

전북자치도, 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대폭 확충

2030년까지 국비 7371억 투입 배수 개선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매년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배수시설 정비에 나선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농민들이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영농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7,371억원을 들여 도내 61개 지역, 총 8,270헥타르(ha)에 달하는 침수 취약 농지를 대상으로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배수장 22곳, 배수로 248km, 배수문 94곳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정비하게 된다.

올해는 사업비 920억원을 투입해 배수장 7곳, 배수로 20곳, 배수로 47km 구간 정비에 나선다.

이는 2019년(501억원), 2022년(641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규모다.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장마철에도 안심하고 농사지를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17개 지역(2,039ha)은 현재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수 개선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신설, 흙으로 된 배수로를 콘크리트로 바꾸는 작업, 오래된 배수시설 정비 등이다.

이 모든 공사는 전액 국비로 지원돼 지자체나 농민들의 재정 부담은 없다.

전북자치도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농업용 배수장 92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고, 고장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 설비도 사전에 정비했다.

아울러 배수 효율이 떨어지는 배수로 400km 구간에 대해서도 우기 전까지 준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이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는 예측이 어려워,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 배수장과 배수로의 상시 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통해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엄마 아빠 한표 꼭~”... 대선 투표 독려하는 어린이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로비에서 열린 '엄마 아빠 투표해요' 전시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엄마 아빠 투표해요' 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어린이들이 그린 선거 벽보를 전시하는 프로그램으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전도청 민원실 앞 로비에서 열린다.

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전수조사 나선다

익산 모현동 모녀 사망사건 계기

생계급여 중지자 등 1만3198명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면적인 조치에 나섰다.

도는 최근 익산시 모현동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 등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자격이 변경되거나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1만 3,198명이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 중지자는 7,624명, 의료급여 중지자는 5,934명에 달한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시군과 읍면동의 복지담당자들이 심층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장기적인 사례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포함하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차상위 본인부담감경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와 연계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민간 복지자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 삶의 의지가 약하거나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27일 도와 시군 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며, 오는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사 이후에는 대상자별 상황에 맞춰 각종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14개 시군의 긴급복

지 담당자들과도 회의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이러한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중지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와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2025년 글로벌 대학 예비지정에 선정됐다.

글로벌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Global+Local) 대학 육성을 목표로 비수도권 대학 중 30곳을 선정해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하는 대형 사업으로, 총 81개교가 도전했다.

이에 따르면 연합 체제로 도전한 이번 사업에 전주대와 호원대는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K-Culture

전주대·호원대, 올해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선정

'K-컬처 게이트웨이·K-라이프 캠퍼스 실현' 토대 역량 집중

8월 중 교육부에 실행계획서 제출... 9월 최종 결과 발표

Gateway, K-Life Campus 실현'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모두가 찾아오는 캠퍼스 △실무가 완성되는 캠퍼스 △성자가 지역으로 순환되는 캠퍼스라는 목표를 설정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양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K-Food △K-Contents △K-Wellness △K-Tech 등 4대 분야의 실습과 창업이 통합된 체험형 실습공

간인 K-Life STARdium을 중심으로 캠퍼스를 재구조화한다. 이 공간은 전주대 랜드마크인 2만5,000㎡ 규모의 스타센터 도서관 공간을 리모델링해 오픈형 실습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교육의 완성형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학교기업과 협동조합이 함께 운영하는 'Edu-Enterprise

Learning Model'을 도입기로 했다. 이에 학생들은 단순 학습자가 아니라 실습의 주체이자 협동조합의 일원으로 기획부터 운영, 수익 분배까지 실제 경영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성과가 곧바로 시장 성과로 연결되며, 창업으로까지 이어지는 Spin-Off 시스템도 운영해 완성형 실무 교육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험형 실습 공간을 통한 수익을 기반으로 적립되는 Global 기

금은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및 스타트업·창업 지원 등 지역 사회에 수익 환원 및 자립화를 위한 공공환원형 교육 생태계 조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된 전주대와 호원대는 8월로 예정된 교육부의 본 지정 일정에 혁신기획서를 토대로 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해 8월 중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9월 발표된다.

/장은성기자

